



# 지식 기반 사회의 지방 대학 발전방향

이 수 오 | 창원대 총장

## I. 서론

흔히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한다. OECD는 지식 기반 사회를 지탱하는 지식 기반 산업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투입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R&D 활동이 활발하거나, 정보통신 기술의 사용 또는 정보통신 기술이 부가된 제품의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은 산업 등이 지식 기반 산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기술(IT), 생물 산업(BT), 신소재·극미세기술(NT), 신에너지·환경(ET),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등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요 지식 기반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산업 자본이 지배하던 20세기 사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자본이 아닌 인적 자원과 지식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지식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속도가 점점 단축될 것이며, 인적 자원의 핵심이 되는 지식을 형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최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산업 사회가 수직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사회라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인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은 과거의 조직 사회에 잘 적응하는 인력보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창조적이고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며, 국제화 시대에 걸맞도록 외국어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갖춘 사람이다.

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해 나갈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완벽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모든 내외 환경이 열악한 지방 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지방 대학의 문제점과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지방 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II.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대학의 문제

### 1. 수도권 집중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들은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들에는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 인프라도 확충하여야 하고,

각 지역의 산업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 기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난 몇 년간 불어닥친 벤처의 열풍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도 지식 기반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IT, B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지식산업의 대명사인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이 서울에도 생겼는데 소위 말하는 테헤란밸리가 바로 그것이다. 옛말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벤처를 하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생겼으며, IT 산업들이 서울의 특정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 첨단 정보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틀림없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동시에 사업에 필수적인 고급 인력, 정보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 자본이 그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모여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모든 산업화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을 지향하였다. 그 결과 경제는 물론 인구, 산업, 문화, 예술 등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1999년도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1.8%에 지나지 않지만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 지표를 보면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 공공기관의 84.4%, 외국 기업의 75%, 30대 그룹 주력 기업 본사의 88%, 정보통신 업체의 89% 등 핵심 기관

들은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았는데 특히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재정 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다.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서울과 지방이라는 극단적 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영·호남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제 이외에는 별 뾰족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영·호남간의 문제가 자기 지역을 너무 사랑하는 데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자기 지역을 사랑할 수 없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겠다. 자기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방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주민이 살기 원하는 지역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적 인프라도 확충하여야 하고, 각 지역의 산업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 기반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현황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30조 원을 넘고 있으며,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학생 1명을 유학 보내려면 월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이 금액은 소위 중산층 가정에서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사회구조 때문이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 지방 대학보다 특성화되어 있고, 특별히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야만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학연의 도움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소위 비전이 있다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2000년도 교육 통계에 의하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이 184개인데, 이중 38%인 70개가 수도권에, 62%인 114개가 지방에 있으며, 일반 대학의 경우는 전체 161개 대학 중 41%가 수도권에, 59%인 95개 대학이 지방에 있다. 또한 전체 대학생 중 수도권 지역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40% 정도이므로 우리나라 전체 대학교육의 60%를 지방 대학이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00학년도 수도권 대학의 대학 입학 정원은 전체의 34%이지만, 고3 수험생의 42.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치보다 높은 45.2%의 학생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가뜩이나 국가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여 2003년이면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나마 학령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방 대학은 무더기 정원 미달 사태를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이다. 이미 전라남도 지역 대학의 미충원 비율은 25.7%에 달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중 지방 소재 고교 출신자는 약 50%에 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수능성적 상위 5% 이내 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62.46%에 달하여 우수한 학생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심각하다. 게다가 편·입학 자율화 조치로 인하여 지방 대학 재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수도권 대학 편입 선발자 중 지방 대학 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이며, 이 영향에 의해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입학생의 절반이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도 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이 지방 대학보다 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취업의 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차이가 더욱 심각한데, 대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며 각종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자의 9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이 양적인 면에서는 대학교육의 60%를 담당하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3. 지방 대학의 위기의 원인

지방 대학이 그 규모나 역사에 비해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정부의 국가 운영 정책에 따른 원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이 지방 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

“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보면 대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며, 각종 국가고시의 경우 합격자의 9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이 양적인 면에서는 대학교육의 60%를 담당하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

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시행한 결과 대학교육은 물론 사회의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다. 일례로 정부의 국토개발 종합계획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 첨단산업을 유치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첨단산업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장기 계획이 없었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정책의 혼선이 빚어져 투자의 효용성이 낮아졌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화 산업 분야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세 번째 원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로 하고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과 연계하여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양성을 조정하겠다는 시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2)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 의한 원인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조차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없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정체

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학 설립 및 학과 증설, 증원을 허용하여 부실한 대학을 양산시켰다. 또한 규모의 논리를 앞세워 학생 수가 많은 대학 위주로 각종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가속화 시켰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 환경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증원·증과를 허용해야 하며,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동결하기보다는 실사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가 원하고, 지역의 특성화와 연계되는 경우 과감하게 허용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피드백 시켜 정책에 재반영시키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개혁을 비롯한 많은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서 정작 자율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통하여 통제하는 등 획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례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학부제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해 학문적 유사성이 전혀 없는 학과를 합쳐 학부로 전환한 대학이 얼마나 많은가? 모집 단위 광역화와 학부제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이렇듯 강제적인 학부제 시행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의한 원인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 일과성 사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를 낮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되면 이제까지의 자본집약적 산업 구조를 지식 집약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만이 경쟁력을 갖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고급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갖 혜택을 주며 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대학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말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에 사람이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4) 지방 대학 스스로의 원인

지방 대학의 위기에 대한 절반의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와 교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구적 노력을 등한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들이 양적 팽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무분별한 학과의 신설, 입학 정원의 확대를 시도

하였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당초 설립 계획과는 다르게 재단 전입금의 지원 없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한 대학 경영을 하므로써 투자 재원의 한계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방 대학 육성 의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방 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중하위권 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인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든 지방 대학들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따라 대학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 5) 국민 인식에 의한 원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사고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 하겠다. 현재 지방 대학생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의 패배 의식이다.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고, 쉽게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서는 안된다. 말을 물가에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복수 전공, 연계 전공 등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제공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또한 기업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주기를 바란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교육개혁을 총괄하였던 엘 고어 부통령은 1999년 'American Learning Exchange' 라는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기업의 교육 투자는 설비 투자보다 3배나 높은 투자 효율을 보장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기술을 대학에서 공급해 주길 원한다면 기업 스스로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여 지방

“

일반적으로 대학의 책무를 교육, 연구, 봉사로 정의하지만 지방 대학의 경우는 지역사회를 선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무가 있다.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아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수하지 않은 인재를 잘 교육하여 우수한 인재로 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사과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에 근무시키면 얼마 후에 직장을 옮긴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여전히 본사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선발 기준을 지나치게 어학 위주로 하여 전공 교육의 부실화를 자초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요구하면서 인턴 제도나 현장 실습 요구에 대해서는 인색한 실정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이유들이 총체적으로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방 대학의 위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중심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국민 교육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식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재충전해야 한다. 아무리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을 일부 기관에서만 교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마다 고유한 사회 문화가 존재하며, 이것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일은 그 지역에서 담당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그 지역에서 교육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Ⅲ. 지방 대학 발전 방향과 과제

#### 1. 지방 대학 육성의 필요성

지방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전체가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경영 측면과 국민 교육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국가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은 국가 존립을 위한 절대절명적 과제다. 형제지간이나 친구지간에도 서로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해야만 그 우애가 돈독해 진다는 말이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소외된 지역에서 야기된 불만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는 지식 중심의 미래 사회에서는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하는가가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이 되며, 이러한 경쟁력은 지식을 창출하는 대학을

#### 2. 지방 대학 스스로의 발전 방향 설정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모든 지방 대학들이 세칭 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과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지방 대학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대학들은 우선 스스로의 정체성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책무를 교육, 연구, 봉사로 정의하지만 지방 대학의 경우는 지역사회를 선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무가 있다. 일례로 창원대학교의 경우 '가장 지역적이며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대학은 결코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학 별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아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수하지 않은 인재를 잘 교육하여 우수한 인재로 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사과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여 인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남들이 모두 IT, BT를 하니 우리도 이 분야를 특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식 기반 사회의 산업 특성은 첨단 기술들의 융합에 있다. IT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BT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으며, NT 산업이나 MEMS 산업의 발전 없이도 BT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결과로 인재를 배출하게 되며 그 인재가 지식 확산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대학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을 토대로 한 특정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 대학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생교육 활성화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의 지식 습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책무를 다한다는 것과 신규 교육 수요자의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에 있다. 창원대학교의 경우 학부 입학 정원이 2,090명이지만 매학기 3,5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반 학생이 아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캠퍼스를 활보할 때 비로소 대학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스스로 경직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교수가 배운 대로

가르쳐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아니 일부 지역에서는 입시 때만 되면 모든 교직원 이 원서를 들고 뛰어 다니는 일이 이미 벌어졌다. 따라서 대학은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기존의 교수방법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교수방법을 개발하는 등 무엇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고민을 해야 한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합 학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연계 전공 등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는 국가대로 사립대학의 재단은 재단대로 교수 인력의 확충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지방 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지방 대학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첫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사이의 관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 및 역할 분담, 재정 지원의 형태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종합국토개발계획, 산업 정책, 과학기술 정책 등을 수립할 때 반드시 교육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대학 육성책이 지방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지방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 수요자가 외면하는 대학을 정부에서 언제까지 보호·육성할 수는 없다. 지방 대학의 육

성을 위한 과감한 대책을 도입하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과 부실한 경영을 하는 대학과는 엄격히 구분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 31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 대학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자구 노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동시에 조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외국에서 잘 적용되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는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듯이 이론적 혹은 이상적인 제도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선불리,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이 지역사회를 선도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문화, 사회 사업을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증폭되는 투자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지역 사랑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지방 대학 졸업자들이 공평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체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부터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업체 모두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의 현지 인력은 자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해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서 요구하여 개발한 주문식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에 대한 채용 보장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과 대학이 연계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수 인력의 확충, 기숙사 시설의 확충, 외국 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 및 시설의 확보, 고속통신망 등 각종 기간 시설의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부실 금융,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하면서 교육을 살리기 위해 투자하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답답하기만 하다.

## IV. 결론

지금까지 지방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현재 '지역 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국민 모두가 지방 대학이 처해진 현실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씩 매듭을 풀 수가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남의 탓만 하지 말고 대학 스스로가 살길을 찾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감하게 기득권을 벗어 던지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심각하게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필명**

### 이수오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생물공학박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총장 협의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창원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발효공학』, 『진실의 문을 찾아서』, 『그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등이 있다.